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 2012년 9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2년 8월 18일 ~ 2012년 9월 7일

### 주요 키워드

1.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갈등 :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협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비판함. 이후 31일 양 노조는 의협회관 앞에서 노환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노환규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함. 이어 3일 의협은 노조원 2명에 대한 맞고소를 실시.
2.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 23일 제약협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려 43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신규 지원을 약속하고, 제약산업을 위한 R&D 비용 지원 등의 5대 과제를 밝히기도 함. 현직 대통령이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이에 제약업계는 고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함. 6일에는 제약관련 6개 단체장이 회동하여 정부에 요청할 사항과 실행해야 할 현안 등을 논의함.
3.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 : 29일 504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이 재분류되었음.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잔탁정 75mg 등 200개 품목, 동시분류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1%등 42개 품목임. 6월 7일 최초 분류안과 비교할 때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 등 3종임. 논란이 되었던 피임약의 경우 그간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음.

### 1. 보건의료정책

#### ○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토론회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열린 위 토론회에서,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본인부담금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행위 및 치료재료 비급여항목의 코드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증가하며 건보급여액이 증가함에도 보장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가구가 부담이 큰 의료비 지출이 더욱 일어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국민의료비의 구성과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는 선택진료비 1조5000억원, 검사 및 MRI 8000억원, 주사·처치·수술료 8000억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간병비는 1조5000억원으로 이 또한 전액 환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해 국민의 일 권리와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로 환자 측 확인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요양기관에 비급여 대상 내역과 금액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인순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대상 항목의 복잡성, 비급여 결정

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체계화·활성화하고, 비급여 대상 항목의 전면적 재평가 및 단계적 급여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관계자 역시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이에 대한 알 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와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비급여 축소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현재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필수진료 중심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소요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기준' 제정

복지부는 21일 위의 기준을 제정하여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에 따라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은, 전년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올해 7월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가산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양호기관이라고 하며, 지급금액은 양호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금액과 관리환자 수에 따라 지급하는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지급한다.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 분석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시행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2011.10.1부터 시행)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4.1부터 시행) 시행 3개월간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이며,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환자수는 63만명 감소하고, 동네 병의원 외래환자수는 79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은 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3개월 동안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1만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개)였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와 관련,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수련보조수당 폐지 계획 재검토 주장

보건복지위 소속의 남윤인순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전공의 충원율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여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오는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남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는 81.6%(2004년)에서 59.7%(2011년)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 ○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고,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받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지원예산이 항상 법률이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 간의 차액이 사후에 정산되지 않

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 4516억원 등을 적게 지원했다. 개정안은 사후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산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의 법정금액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 악의적 건보료 고액체납자 9월부터 공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했다.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신설했다. 이 위원회에서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 유무를 판단한다. 개정안은 또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산정된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5만원으로 3.4%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3.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해 급여비 수준을 인상했다.

#### ○ 사무장병원 허위·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 위반을 신고한 사례로, 비 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 ○ 30일,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의대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는데, 최근 의료이용 팽창으로 의사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사부족 심화, 전공의 수급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와 공공보건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사회적 최소 수준까지 확보하려면 공공의사의 수급 및 효율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3.1명)에 비해 61%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생수도 8.8명(2009년)으로 OECD 평균(9.9명)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워, 국공립 의대 신설 및 의학사관학교 신설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설된 학교의 입학인원 전원은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 근무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도 내걸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등도 측은 의사 정원증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반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비롯해 이진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의료계 측은 절대량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들은 의사 수 증가율(40%)이 인구증가율(7.5%)에 비해 높아 오히려 2020년이 되면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공보의 배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추가 배출보다는 배치와 관리 정책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사인력의 부족을 인정하며 비임상의사의 확대 필요성 및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의 보건소가 지역사회 건강의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우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했다.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물리적 거세 통한 성폭력 범죄자 처벌 법 제정안 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교화나 재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감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역이나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안하면, 사업주에 보험료 물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 대표에게 보험료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지난달 제15차 회의를 열고,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관리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한 개인사업주 대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사용자는 사업장들이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런 판정을 내린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 의업단체 동향

#### ○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6기 회장 경문배 전공의 당선

17일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개표에서 1만851명 중에 4178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경문배 당선자는 3271표의 지지를 받았다. 경 당선자는 대전협은 의료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회적 정의를 의료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오로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문배 회장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2년차로 재직 중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1일 업무를 시작하면서는 전공의 권

리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전공의 폭행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로써 노조활성화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빈크리스틴 의료사고 재조명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행보

MBC 시사매거진 2580은 19일 밤 방송을 통해 2년 전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중현군의 사례를 들어 의료사고의 현 주소를 짚었다. 정 군은 지난 2010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정맥으로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으로 투여되는 의료사고로 치료 열흘 만에 사망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주장은 환자와 병원측이 달랐다. 정군의 부모는 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로 주입한 후 나타나는 증상에 관해 쓴 전문가 논문을 제시하며 의료사고를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척수강 내로 투입된 시타라빈 때문에 뇌수막염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정중현군 사망이 의료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며, 이는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사가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인만큼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인 전공의 과중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적·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환자단체들은 환자안전법(일명 중환이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20일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들이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선 환자안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제 18대 대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도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 기자실 깜짝 방문

노환규 회장은 20일 사전협의하지 않고 기자실을 방문해, 포괄수가제와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협 관계자 2명과 함께 케이크와 음료를 사들고 와서, 6월 29일 조치에 대해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정몽준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으로 당초 예정했던 포괄수가제 수술 연기 방침을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언론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U헬스케어와 원격진료는 분리되어야 하고, U헬스케어 분야의 하나인 원격진료는 한국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는 원격진료가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들의 이해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 비판

의협은 쇄신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제안이 심평원의 독립성·객관성·신뢰성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료비 심사는 보험자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 심사기구의 필요성과 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요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심평원이 수행해오고 있다. 의협은 또한 이러한 제안이 보험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의료계의 진료권한을 더욱 규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건보공단은 방만한 경영상태와 몸집불리기 등 불건전한 조직 자체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절차 거부 요청

의협은 21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왜곡·편향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단결해 이처럼 불합리한 의료분쟁제도를 무력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인식해서 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의학적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사가 조정신청에 응하는 그 순간부터 진료기록의 조사·열람·복사 거부 등 많

은 부당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의협은 지난 5월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해 '대불금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료분쟁조정법의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 ○ 포괄수가제 관련 온라인 논쟁, 법정 싸움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욕설과 비방을 일삼는 악플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단 측은 의협 또는 전의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일부네티즌들이 제도 홍보내용에 대해 무차별적 비방과 욕설 댓글, 공단직원 신상털기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어떤 해당 직원은 불면증과 구토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이번 고발방침은 의협이 지난 17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22일 주요 일간지에 건보공단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3번째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가 보험혜택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 대한의사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강력 대응

의협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진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가 리베이트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자영업자로서 할 수 있는 이윤추구(PMS: 시장조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인 무효소송을 통해 처벌의 부당성을 개선하고 담당 공무원을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저지 대책을 내놓아 대책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이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범죄 의료인 영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억울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공단노조 대한의사협회 공격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노환규가 의협회장이 된 이후 드러난 행태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가 눈에 띄는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노환규 의협회장이 과거에 포르노 게시판을 운영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를 의료계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암덩어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의협이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3차례의 일간지 광고 및 직원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노조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은 노조의 공격에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는 노조가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전국의 사총연합은 노조가 정부와 공단을 대신해 총대를 메는 것은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단은 스스로 정당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원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노조의 위와 같은 처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한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 시민단체, 건강서울 36.5 실행수단 부족 평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및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 의실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평가와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정책 세부 항목들이 다른 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과 중첩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36.5 계획이 공급자 마인드로서만 제안되었고, 관련 사업들과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과 사업시행 등이 염려스럽고,

근본적인 문제 인식 공유와 종합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 병원 인력 통계를 둘러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

간협은 지난 2000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이 50% 이상 줄었다는 간무협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정부 공식 통계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직후인 2001년 말 간호조무사 인력은 의원급에 4만5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8902명, 병원급 5886명 순이었다. 지난 2011년 말에는 의원급은 5만6569명, 병원급 1만2138명, 종합병원급 이상 9527명으로 50.9%가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의 경우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간협측의 설명이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대거 채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진료권을 박탈해 의원급에서도 내몰려고 한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협이 제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2000년 대비 2012년에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 인력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16.7%, -18.0% 감소했으며 병원급은 66.9%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수가 늘어난 것도 의료기관 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기초로 통계를 작성하고, 간무협은 심평원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는데 복지부가 발간한 자료에 통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의 이러한 공방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생긴 마찰로부터 비롯됐다.

#### ○ 대한의원협회,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계획 철회 촉구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히자, 대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통해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란 사실 그 하위개념인 화상진료일 뿐이라며, 이는 전시상황이나 천재지변과 같이 극한 상황이나 특수한 지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고 의료산업화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부정확한 진찰로 인한 병증 악화 및 의료비용의 상승이 우려되며,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말하며 원격진료 추진을 비판했다.

#### ○ 기공사협회장 불신임안 가까스로 부결

지난 2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제48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협회장 불신임 결의 안건에 대해 투표에 부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안건을 논의하기 이전에도 총회는 여러 회원들의 규탄 발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손영석 치기협회장은 불과 24표 차이로 1년 여 남은 임기를 마저 꾸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불신임 결의 안건의 사유는 의원 총회에서 협회 임원 일괄 사퇴 및 재선임 후 협회의 총체적인 회무 불신, 노인틀니보험 정책사업 실패(직접수령, 분리고시, 시위), 일반회원 협회장 퇴진 탄원 서명, 시도회장 및 시도경영자회장 일괄 사퇴 등이었다. 이후 치과기공계 전국 시도회장이 지난 7월 창원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잇달아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 ○ 대한산부인과학회, 전문의 대상 분만관련 근무 환경 조사

학회는 지난 6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을 대상으로 분만관련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0대 산부인과 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아예 분만진료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1.6%였던 반면 30대인 경우에는 10.2%였다. 최근 낮은 연령대의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자 산부인과 의사는 처음부터 아예 분만업무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7.9%로 남자(2.7%)의 약 3배에 달했고, 분만을 하다가 그만 둔 경우도 여자(26.3%)가 남자(20.5%)보다 높았다. 분

만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의 60%는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이 밖에도 병원 운영 적자 등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로 인한 난동이나 폭력적 진료방해(3%), 의료소송 발생(2%)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산과 무과실 무과실 보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0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답했으며, 51%(282명)는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회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대한의사협회, 10월부터 회원 면허신고 업무 개시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9일 현 면허신고제가 악법적 요소가 많은 만큼 즉각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면허신고 미 이행시 면허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잉조치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경고나 과태료 처분 등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인의 입장에서 절차를 간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포함한 면허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해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개정된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는 면허신고 시스템을 9월 중에 구축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내놓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의료계 원로, 노환규 의협 회장 일방통행 의사결정 비판

문태준 의협 명예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협 회장을 역임한 직전 회장단이 모여 논의한 결과, 노환규 현 회장과 깊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회장이 혼자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도의사회장들 및 일반회원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정부 기관과 잇따라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문태준 명예회장은 의협회장이 똑똑하다고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시도의사회장들도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의협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시도의사회장들이나 산하 단체장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이 민주당 모바일 경선 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

건보공단의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31일 의협회관 앞에서 노환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노환규 회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50여 명이 참여해 건보공단에 대한 왜곡과 거짓을 중단하고, 노환규 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간지 광고를 통해 직원들이 승진잔치를 벌이고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자존심이 깎인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의 전문사이트인 닥터플라자에는 각종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있고, 간호조무사를 간조로 표현하며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4명의 항의방문단을 꾸려 노환규 회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경찰 기동대가 쳐놓은 바리케이트 사이를 통과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후 31일 양 노조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노환규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공단 노조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전국 의사결의대회에서 의사협회를 규탄하는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3일에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노조원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맞고소했다. 피고소인은 황병래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과 성광 한국노총 공공연맹건보 공단직장노동조합장 등 2명으로 협박·명예훼손 및 모욕위반 혐의이다. 건보공단 노조의 의협회장 고소에 따른 무고혐의도 추가할 것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 전국 의사총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김윤 교수 해고 요구

전의총은 4일 김윤 교수는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 열린 TV토론이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강변해 정부와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간지나 SBS 시



사토론 등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하며,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전의총은 김 교수의 병원별 평균진료비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가 포괄수가제 시행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 김 교수의 원 논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포괄수가제 시행에 공을 세워 심평원 연구소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중요 논문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연구소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김 교수를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 의료계,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에 3만여명 등록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약 3만 여명이 국민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5일 국민경선 참여 인원은 시도의사회에서 1만 6328명, 전의총에서 1만1749명이 등록했으며 의사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의협 직원 및 의대생들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초 목표치인 20만명보다는 낮지만, 3만명도 나름 성과가 있는 숫자이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는 말을 아꼈다. 의협은 회원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권역별 정책간담회도 개최해, 협회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설정에 있어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 천연물신약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자료 배포

한의협은 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의약품 분야를 한의사의 당연한 업무범위로 규정하는 관련법령 미비로 현재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자유롭게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이 명확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천연물신약을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설정하고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천연물신약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이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 ○ 대한의사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합동대책반 구성 촉구

의협이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한 모텔형 병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모 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 3. 보건의료 산업과 기술

#### ○ 세브란스병원, 전국 1만 병상 프로젝트 추진

이철 연세의료원장은 2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브란스병원이 전국 어디서나 세브란스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브란스 1만 병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역간, 병원 규모간 불균형이 존재해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병원을 더 지어 병상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전국 병의원과 맺은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브란스와 협력병원 간 전자차트 공유 등 의료시스템 구축 사업, 각지 대학병원과 연계한 교육사업, 병원 경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u-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새로운 분야의 의료산업화 방안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제약, 바이오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이라며, 모바일을 이용한 개인의 건강관리 등을 통해 미래의 의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기업은 등 여러분야의 사업과 손잡고 의료산업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서울대학교병원,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

서울대병원은 27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종합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기업의 마케팅활동, 인지도, 신뢰도, 충성도 등을 조사 평가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제조업을 하반기에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는 지난 5-7월 26개 서비스군 9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으며,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는 서울 거주자 3500명에게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어, 서울대학교병원이 72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 ○ 9월 12~14일, 바이오코리아 2012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u-Health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보건신기술과 보건제품 등의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올해 홍보부스에 전시되는 보건신기술인증제품은 총 29건이며 86건의 보건인증제품과 같이 소개된다. 14일에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글로벌 u-Health 전략과 경험, 스마트 헬스의 시장 동향과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 스마트 헬스의 글로벌 표준 동향과 표준화 방향 고찰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다. 이들은 u-Health의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토의도 가질 예정이다.

#### ○ 국내의료기관, 중동 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

보건복지부는 29일 한국 보바스기념병원이 국내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보건청에서 제안한 두바이 재활센터(DRC)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입찰에 참여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DRC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통해 후속과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바스기념병원의 본격적인 UAE 파견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보바스 기념병원은 주로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환자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되며 별도의 비용투자 없이 DRC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여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파견되는 의료진은 4명, 재활치료팀 10명(물리, 작업치료사) 등 모두 17명이다.

#### ○ 관동의대 명지병원, 블라디보스토크에 U-헬스케어센터 동시 오픈

최초의 한·러합작 영리 의료법인인 명지국제검진센터는 28일 오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위치한 명지국제검진센터와 관동의대 명지병원에서 U-Healthcare Center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원격 화상진료를 시작했다. 명지병원은 환자상담을 통한 의학교류와 함께 검진 결과상 유소견자들은 물론,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을 희망하는 러시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상 원격진료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 돌아간 러시아 환자들의 원격진료가 가능해, 경비부담이 해소되고 한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이를 통해 러시아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오는 9월초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러간 최대의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국제검진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러시아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센터 이외 고급형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검진기관이 된다.

#### ○ 식품의약품 안전청, 2011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 등 현황 발표

식약청은 31일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 등으로 2011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성적인 무역적자 현상은 해결과제로 지적됐다. 2011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4조3064억원으로 2010년(3조9027억원)에 비해 10.34%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21%의 성장세를 보였다. 생산실적 역시 3조3665억원으로 2010년(2조9644억원) 대비 13.56% 증가하며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생산실적 상위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3804억원), 치과용임플란트(2497억원), 치과용귀금속합금(2319억원) 등으로 특히 치과용 임플란트와 시술기구 생산이 급증했다. 수출액이 1조8961억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하긴 했지만 수입액이 2조8612억으로 여전히 높아 무역적자의 폭이 컸다. 이는 2010년 대비 3.7%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국·독일·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의료기기가 전체 수입액의 70%를 차지했다.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발간

특허동향조사는 암, 줄기세포·재생의학, u-Health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10대 분야 25개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분석에 따르면, 25개 중점기술의 특허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술 중 '암 치료용 줄기세포 개발기술'의 경우 국내 연구가 활발하고 특허 장벽이 높지 않아 우리나라의 원천기술 확보가 유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특허 건수가 한국이 미국에 뒤이어 두 번째로 많아, 암치료 관련 기술이 한국에서 상당히 높고, 원천특허 획득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진흥원은 이 조사가 연구자들과 보건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 참조유전체 정보구축 시작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는 5일 한국인의 질환관련 유전인자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한국인 참조유전체 정보 구축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의 전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그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유전체 연구를 통한 질병예측 및 치료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인 참조유전체 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수년간 한국인 유전체분석을 통해 한국인 고유의 당뇨·혈압·비만 등과 관련된 유전 인자를 발굴해왔다. 이번 사업은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평가조사사업, 유전체역학조사사업 참여자 및 일반인 지원자 40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통해 유전체(30억 염기서열)를 해독하고 유전변이의 종류와 빈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 ○ 인천치과의사회, 송도 영리병원 절대 반대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지난달 23일 인천 의약정협의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송도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인천치과회는 의료인으로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도영리병원 설립반대를 외치며, 최근 불법네트워크 치과로 인해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은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며, 외국계 영리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려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치과회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 환경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을 대한민국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규탄하는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 ○ 정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수립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는 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R&D를 통해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감염병 진단·치료 기술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전략을 수립했다. 추진위는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8대 중점 분야로 신종인플루엔자, 만장감염질환(에이즈, 간염 등), 대체내성균(슈퍼박테리아),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결핵(재발 난치성결핵), 생물테러, 인수공통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등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상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별 범부처 공동기획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변종 감염병 조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4. 제약업계 및 제약정책

##### ○ 다국적 제약사 시장점유율 확대 지속

18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7월 원외처방액 기준 외자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3.3%로 전년 동월(21.5%) 대비 1.9%p 증가했다. 10개 외자사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GSK,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BMS제약, 한국얀센, 바이엘코리아, 한국오츠카제약이다. 이는 국내 상위 10개사(원외처방액 기준)의 점유율(28.4%)이 전년 동월(30.3%) 대비 1.8%p 떨어진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외자사의 시장점유율은 4.1 약가인하 시행 이후 계속 확대되었고, 지난 3월의 시장점유율은 20.4%에 불과했다. 이는 일괄인하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상한가격이 동일해져 오리지널 처방 선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자사의 원외처방액 또한 국내사 대비 하락폭이 적어, 전체 외자 업체의 7월 원외처방액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전체 원외처방액 7%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체 처방액은 6802억원이고, 외자사의 처방액은 2230억원이다.

##### ○ 노바티스 글리벡 인도 특허연장 판결 패소 예정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는 22일로 다가온 인도 대법원의 글리벡 특허 보호 판결이 인도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다국적제약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국적 초대형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인도 정부와의 갈등은 6년 전 인도 정부가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시작됐다. 신문에 따르면 곧 다가올 인도 대법원 판결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원제품과 같은 효능을 가지는 제네릭제품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려는 인도 제약사들로부터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제약시장의 규모는 110억 달러(12조원) 규모로, 2020년에는 이 수치가 740억 달러(84조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도는 제약회사들에게 엄청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난 지난 3월 인도의 특허당국이 독일 바이엘사의 암치료제 넥사바(소레페닙)의 독점권을 해제하고 값이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도산 제네릭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외국계제약사들이 자국 제약사들을 인수해 약값인상의 발판을 마련하는 행동에 대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주요 제약사간 국가간 합병의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거래를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최근 내비친 바 있다. 글리벡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노바티스사가 인도 내에서 무리한 특허연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인도 정부는 글리벡이 특허 연장을 받을 만큼의 약효 향상이 없다고 말했다. 위기에 몰린 노바티스는 특허불허와 관련, 인도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 등은 이번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승소한다면 인도 내에서 제네릭약을 생산해 값싸게 공급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 ○ 23일 제약협회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이 자리에 참석한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국장 정부가 43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을 약속했고, 확정된 예산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인력 공급, M&A 세제 지원, 글로벌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제약산업이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를 밝히고, 우선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확대(백신, 임상1·2상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병원 등의약품 공급대금 결제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선결과제로 꼽았고, 자발적 M&A를 유도하기 위해 M&A하는 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통합 품목에 대한 약가 우

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기업의 국내외 M&A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 펀드 조성, 향후 3년 이내 해외 고급인력 300명을 유치하는 'PB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중장기 필수 전문인력 8000명 양성을 위한 'PB8000'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제약업계는 우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고, 각 부처 장관 및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업계는 정부에 신약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120억원 확보, M&A 지원을 위해 기재부에 요구한 200억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다며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 ○ 건일제약 리베이트 약물 5개 품목 가격 인하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약 5.58%이다.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급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이중 약가인하 대상 리베이트는 2009년 8월 이후 170여개 요양기관에 제공한 9억 4000만원이다. 이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23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도매협회,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해결 나서

도매협회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김성규 위원장은 26일, 9월 중순 협회 회의를 한 후 제약사에 정식으로 불용재고 의약품의 반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용재고 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파손된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팔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폐기를 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므로 약국·도매·제약사 모두 불용재고 의약품 맡기를 꺼려한다. 그런데 도매업체들이 거래 관행상 약국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을 처리해주고 있다며, 제약사에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도매업체들이 결국 비용을 떠안아야한다고 지적했다.

#### ○ 보훈병원 1원 낙찰 관련 동향

한국제약협회는 27일 기존 공급업소(도매업체)가 1개월 간 제약협회를 통한 기부 형식으로, 중앙보훈병원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소가 공급을 포기한 39개 품목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1원 낙찰 후 계약은 성사되었으나 실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인 보훈공단과 해당 도매업소와의 계약 이행 상황을 주시해 가며 대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28일 진행된 보훈병원의 41개 품목 재입찰에서, 납품권을 따낸 씨엠에스메디컬과 목화약품은 개개의약품 당 씨엠에스메디컬이 2원, 목화약품이 5원 정도에 응찰하였다. 이후 한국제약협회가 또 다시 초저가 낙찰이 재현된 보훈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에 대해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제약협회가 1개월치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급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말했다.

####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2011 국내 R&D 투자 현황 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료에서, 2011년 회원사들이 국내 R&D에 투자한 금액은 2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5.3%로, 역시 지난 2010년 대비 0.5% 포인트 감소했다. 임상시험 관련 전체 직접비의 비중(49.4%)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고, 1~3상의 임상시험 투자액(772억원)은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R&D 연구인력은 2011년 현재 893명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이 중 92.2%는 전문연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다국적 제약사가 진행한 임상시험 활동에 참여한 환자 수는 3만명으로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투자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전 세계 시장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 내 투자 활동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 원료합성 2심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4개 제약사(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와의 원료합성특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공단은 5번째 2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유한양행·경동제약 등 2개 제약사와의 2심 재판에서도 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지난 5월 안국약품 등 5개 제약사와 대한뉴팜 등 3개 제약사의 2심 소송도 모두 제약사 승소로 끝났다. 남은 사건 중 오는 9월 27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게 될 코오롱제약 외 3개 제약사건은 1심에서 유일하게 제약사 패소 판결을 받아 2심 재판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사건이다. 공단이 연이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서 2년째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원료합성 소송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 ○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급여 시장 진출 또 좌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아바스틴의 경제성평가 근거가 부족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는 대장암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표적치료제는 단 1개 품목도 없는 상황이지만, 아바스틴은 대장암치료에 단독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과 비싼 약가에 비해 효능이 그리 좋지 않다. 또한 환자 한 명당 월당 약값이 500만원이나 되지만 추가 병용요법으로서의 역할만 해서 회사가 원하는 수준의 약가를 보전해주기 힘들다는 점, 해외에서 논란과 안전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잇따른 허가 취소소식도 급여 등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아바스틴 치료를 실시할 경우 수정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심평원은 아바스틴의 급여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해 회사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급여위에 재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에서는 제약사와 심평원의 공조를 통해 하루빨리 아바스틴이 급여화 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한편 아바스틴과 달리, 세엘진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았다.

### ○ 약사회·식품의약품안전청, 파스·연고제 의약품 전환 놓고 법정 공방

31일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등 5개 분회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 일부취소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해 일반의약품에서 의약품으로 전환된 박카스 등 48개 품목 전환 고시를 두고, 약사회가 파스제와 연고제의 표준제조기준이 잘못됐다고 고시를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원고측은 치료와 약리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약사 직능을 떠나 정책적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 ○ 혁신형제약사 주가 시가 총액 대폭 상승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된 21개 제약사의 8월말 시가총액은 8조6367억원으로, 선정 당시인 6월말(7조9630억원) 보다 6737억원(8.50%)이 늘어났다. 이는 제약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이며, 시가총액이 가장 증가한 제약사는 대원제약(894억원)으로 6월말(712억원)보다 25.6% 뛰었다. 종근당(25.2%)과 한미약품(23.5%)도 20% 이상 상승세를 탔고, LG생명과학·동아제약·보령제약·한독약품·대웅제약·부광약품의 시가총액이 10%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이 감소한 곳은 삼진제약과 신풍제약 2곳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올해 연말부터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4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자 사실확인 착수

보건복지부가 3일 국내 4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8월 중순경 4개 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100여명에게 사전통지 발송을 완료하고, 지난 3일까지 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약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이에 따라 수수 사실확인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건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복지부에 수수자 행정처분을 의뢰한 사건으로, 7월말 중앙지검이 제약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복지부에 송부하면서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부에 주어진 권한이 적어 확인 작업이 녹록하지 않.

#### ○ 한국제약협회 등 6개 단체장, 5일 대정부 건의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향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에 요청할 사안과 제약업계가 스스로 실행해야할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3일 제약협회 회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 및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단체장들은 제약산업 스스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부응해 정부도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외임상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임상 3상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약 16조원의 정부 R&D 자금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정부 지원이 1조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원 낙찰 등 초저가의 비상식적인 의약품 유통행위와 리베이트를 근절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약가 제도과 관련해서는 일괄약가 인하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지속 추진하기로 6개단체가 합의했다. 또한 R&D 노력의 성과인 신약에 대한 약가를 적절히 보상해 줌으로써 기업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 ○ 제약업계 M&A 확대

슈넬생명과학은 6일 90억원을 들여 청계제약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기로 공시했다. 청계제약은 슈넬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슈넬생과는 안산공장, 청계제약은 화성공장을 통해 각각 의약품을 생산, 판매는 슈넬이 전담하고 있다. 슈넬 관계자는 별도 법인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의 원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바이오회사로의 피인수설도 제기되고 있다. 슈넬생명과학은 올해 상반기 매출(131억원)이 전년 동기(241억원) 대비 무려 45.6% 떨어졌으며, 영업이익(-100억원)은 적자전환했다. 제약업계의 M&A는 일괄 약가인하를 기점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면역세포치료 전문기업 이노셀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 23.5%(2천581만 7556주)를 확보해 최종적으로 이노셀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일동제약과의 M&A설도 심심치 않게 떠돌고 있다. 이 밖에 한국콜마는 최근 비알엔사이언스(전 보람제약)를 220억원에 인수하고 사명을 '콜마파마'로 변경했다.

#### ○ 약가인하 나홀로 소송 패소

법원이 개인사업자 장진석씨의 '나홀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해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7일 장진석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제급여란 제약사가 건강보험체계에 자율적으로 들어가 받는 것이므로 일괄 인하로 사적자치를 침해받는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취지를 밝혔다. 또한 사적자치의 이익보다는 국민 후생이나 건강보험 체계 등의 유지가 우월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이 약가인하에 해당되지 않는 단독등재 의약품'이라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 5. 의약품 재분류안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재분류안 검토보단 대책 합의만 논의

29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발표를 1시간 남짓 앞두고 중앙약심회의가 끝났다. 그러나 중앙약심회의에서 위원들은 재분류안의 타당성 검토보다는 대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약심 위원들은 29일 이틀째 회의를 갖고 피임약에 대한 오남용 방지 대책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뿐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약 하나만 두고도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하루 만나질만에 500개가 넘는 품목을 모두 검토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 ○ 산부인과학회-피부과학회, 의약품 재분류안 도출 과정 불만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피부과학회가 복지부의 이번 의약품 재분류 발표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양 학회는 29일 중앙약심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서울식약청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재분류안 결과에 대한 의견 요약본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리고 하루 만나질만에 500개가 넘는 의약품을 검토하는 중앙약심의 일정이나 회의 당일 복지부 발표 계획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며, 전문가의 의견수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약심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선정 기간이 길어지며 위원들도 의약품 재분류안을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그리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남용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해도 끝까지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29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

이번 재분류로 전환되는 품목은 총 504개(전체의약품의 1.3%)로, 이중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262개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의약품은 200개 품목으로,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mg(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분류 품목은 42개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mg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스(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사용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동시분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정보 수집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6월 7일 최초 분류안과 비교할 때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 등 3종이다.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이나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대부분 대체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었으며,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 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해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용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



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 의약품 재분류 결과 관련, 각 단체 의견

대한약사회는 29일 국민적 요구와 약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긴급피임제 등 일부 품목의 최종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발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반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의 현행 유지라는 복지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응급피임약은 여성을 약자로 만들고 건강을 해쳐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항상 불리함을 주는 약이라고 말했다. 여성 민우회를 포함한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30일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둬으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 피해 등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임약 재분류 논의가 여성의 현실과 경험 그리고 건강접근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의 응급피임약 접근성 확대 방안과 복약안내서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 보건복지부, 무료피임약 제공 방법 검토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처방전 받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무료피임약 제공 방법으로 제약사의 기부 혹은 정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그대로 유지하며 산부인과 전문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시적(3년)으로 보건소를 통해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1개당 지원받는 금액은 약 3억5000만원으로, 보건소는 이 금액을 여러 사업에 나눠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전피임약을 처방받도록 문화를 바꾸기 위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에 제약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 의약품 재분류 504개 품목 현행 급여체계 유지 결정

504개 재분류 의약품의 급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환되는 의약품 매출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 262개 품목은 급여적용을 받지 못한 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추가 진료비가 소요되며, 의약품 접근성도 떨어진다. 환자부담금이 100%에 달하는 비싼 약을 의사들이 처방할지도 불투명하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200개 의약품의 경우, 약국을 통해 구매하면 100% 환자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경우 종전대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의약품에 성격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와 보험급여 체계와의 상관관계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 개최

식약청은 6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SETEC 국제회의장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표시기재와 허가신고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품목 변경 안내 스티커의 경우 현재 유통 중인 제품과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제품의 외부포장에 변경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특히 약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재분류 정보를 알리는 안내판을 약국 내에 6개월동안 게시해야한다. 동시분류로 인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재분류 시행일인 3월 1일 전에도 생산·수입을 할 수 있지만 판매는 시행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전환 의약품의 약가문제를 고심하는 눈치다. 즉 약가

등록이 되지 않았던 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심평원에서 약가를 산정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이다.

## 6. 기타

### ○ 콩고 에볼라출혈열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에볼라출혈열로 총 15명의 환자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8.21)의 발표에 따라 이들 국가를 비롯한 아프리카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에볼라출혈열은 필로바이러스과 에볼라 바이러스(filoviridae Ebola virus)에 의한 감염증으로 발열·오한·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25~90%로 매우 높다. 자연숙주는 명확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없으며,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가봉·콩고민주공화국·콩고·수단·우간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 ○ 미국립보건원(NIH) 병원에서 항생제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발생

24일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NIH 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6월 NIH 병원에 폐렴간균으로 입원한 여성이 촉발한 전염으로 17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폐렴간균은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로 불린다. NIH는 연간 연구 예산 3000억원에, 2만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신 첨단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병원측은 첫 입원 여성환자를 중환자실에 격리했고 의료진 병실 출입과 타환자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성 환자가 퇴원한 후 몇주가 지난 뒤, 입원 환자 3명이 슈퍼박테리아인 폐렴간균에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환자실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모든 환자들에 대한 직장조직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 ○ 미국,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피해

미국에서 발생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993명에 이르며 이 중 사망자가 87명으로 나타나 미보건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는 1999년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현재 이 질환에 대한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다.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나 텍사스 지역의 가뭄 때문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현재 발병 지역은 텍사스, 사우스 데카,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미시간 등 6개 지역으로 전체 발병수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텍사스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CDC는 전체 발병의 54%가 뇌막염이나 뇌염을 유발하는 신경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케이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보건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다녀간 세계 39개국 관광객 2500여명이 유행성 출혈열(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각국에 통보했다.

### ○ 미국에서 신종플루 첫 사망자 발생

미국 오하이오 보건국은 지난달 31일, 61세의 여성이 H3N2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메디슨 카운티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로스 카운티 페어에서 돼지에 접촉한 후 병이 발생했다고 보건국은 덧붙였다. 보건국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H3N2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288명에 이른다. H3N2v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확인된 새로운 타입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기침과 발열증세가 나타난다.